

#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정지원 · 강성진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정지원 · 강성진

## 국문요약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대량생산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발전 패러다임으로 인류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먼저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산업혁명 시기에 무한히 존재할 것으로 여겨졌던 화석연료가 고갈될 전망으로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겪게 되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지구온난화 차원을 넘어서 폭한과 폭서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현상을 반영한다. 산업화 이전인 1750년대에는 약 280ppm이었던 대기 중 탄소 농도는 260년이 지난 2007년에 380ppm에 이르러 무려 100ppm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적인 경제발전 전략이 화석연료의 고갈 가능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학계에서 예상하는 주요 에너지원의 가채연수를 보면, 원유 40년, 천연가스 59년, 석탄 114년으로 자원 고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석연료의 고갈 가능성은 에너지 분배와도 관련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자원의 희소성이 확대는 국제 자원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일시적인 수급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불균형 차원을 넘어, 미래 불확실성을 이용한 투기자본에 의한 매매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이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응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녹색성장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녹색경제나 저탄소 사회와 같은 유사한 용어와 녹색성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녹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한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명시된 녹색 ODA는 환경분야 ODA 범주를 넘어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녹색성장정책을 명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ODA 정의에 따라 DAC 회원국의 녹색성장 ODA 규모를 비교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녹색성장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각각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서 녹색경제·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국제협력에서의 고려 요소를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ODA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최근 DAC이 발표한 환경 ODA 현황과 비교한다. 제5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정책 제언을 간략히 제시한다.

차례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13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녹색성장 .....	17
1. 개념 .....	18
가. 지속가능발전 .....	18
나. 녹색경제 .....	25
다. 녹색성장 .....	27
2.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	35
가. Rio+20의 녹색경제 .....	37
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녹색성장 .....	39
다. OECD의 녹색성장 정책 .....	41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	44
제3장 녹색경제·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의 역할 .....	49
1. 녹색경제·녹색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	50
2. 국제협력의 필요성 .....	52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56
가. 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역량 및 기술개발 지원 .....	57
나. 녹색성장의 ODA에 통합 .....	58
다. 정책 일관성 .....	59

<b>제4장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 현황</b> .....	<b>63</b>
1. 환경 ODA .....	65
가. 정의 .....	65
나. 현황 .....	66
2.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 .....	68
가. 정의 .....	68
나. 녹색 ODA 및 녹색성장 ODA 분류 .....	69
다. 녹색 ODA 추이 .....	73
라. 녹색성장 ODA 추이 .....	76
3.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 비교 및 시사점 .....	78
 <b>제5장 정책 제언</b> .....	 <b>81</b>
 <b>참고문헌</b> .....	 <b>87</b>

표 차례

표 2-1.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비전, 전략, 정책방향 .....31

표 2-2. 녹색성장의 정의 비교 .....33

표 2-3. Rio+20에서 제시한 녹색경제 정책의 내용 .....38

표 2-3. 녹색성장 측정 지표(안) .....44

표 3-1. 녹색성장의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효과 .....57

표 3-2.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주요 지원 분야 .....60

표 4-1. OECD DAC의 환경 ODA 개념 .....66

표 4-2. DAC 회원국의 환경 ODA 현황 .....67

표 4-3. 녹색성장 ODA 분류 .....71

표 4-4. DAC 회원국의 녹색 ODA 추이 .....74

표 4-5. DAC 회원국의 녹색성장 ODA 추이 .....77

## 그림 차례

그림 2-1. 녹색성장지표의 체계 .....	43
그림 2-2.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	47
그림 3-1. 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 .....	54
그림 3-2.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요소 .....	60

##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EU 조약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내용 .....	22
------------------------------------	----

# 제1장 서론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대량생산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발전 패러다임으로 인류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먼저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산업혁명 시기에 무한히 존재할 것으로 여겨졌던 화석연료가 고갈될 전망으로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겪게 되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지구온난화 차원을 넘어서 폭한과 폭서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현상을 반영한다. 산업화 이전인 1750년대에는 약 280ppm이었던 대기 중 탄소 농도는 260년이 지난 2007년에 380ppm에 이르러 무려 100ppm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적인 경제발전 전략이 화석연료의 고갈 가능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학계에서 예상하는 주요 에너지원의 가채연수를 보면, 원유 40년, 천연가스 59년, 석탄 114년으로 자원 고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석연료의 고갈 가능성은 에너지 분배와도 관련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자원의 희소성이 확대는 국제 자원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일시적인 수급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불균형 차원을 넘어, 미래 불확실성을 이용한 투기자본에 의한 매매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이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1) 강성진(2010a), p. 155.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응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녹색성장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녹색경제나 저탄소 사회와 같은 유사한 용어와 녹색성장과의 연과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녹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한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명시된 녹색 ODA는 환경분야 ODA 범주를 넘어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녹색성장정책을 명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ODA 정의에 따라 DAC 회원국의 녹색성장 ODA 규모를 비교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녹색성장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각각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한다. 제

3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서 녹색경제·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국제협력에서의 고려 요소를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ODA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최근 DAC이 발표한 환경 ODA 현황과 비교한다. 제5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정책 제언을 간략히 제시한다.

##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 녹색성장



# 1. 개념

## 가. 지속가능발전

인류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중요 요소인 부존자원의 한계와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그러한 욕구와 열망을 무한히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통해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달성한 것과는 달리, 여전히 많은 국가가 에너지, 식량, 주거, 의복, 일자리 등에서 최소한의 필요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빈곤과 불평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부존자원의 한계와 환경오염 방지라는 제약 하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인류의 삶의 질 개선, 빈곤 완화, 불평등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대두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

과거의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한 대표적인 보고서는 1972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한 로마클럽이 작성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인구증가, 자원고갈, 그리고 환경오염 추이를 볼 때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없으므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로성장(zero growth)’ 전략을 추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비록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은 동의하

지만 이를 위하여 경제성장을 희생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에서 제로성장 논리는 수궁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과 개발 중 택일해야 하는 전략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같은 해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Planet)’라는 슬로건 하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계기로 인류 발전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처음 제기되었다. 이후 환경과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표한 ‘우리 공통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를 통해서이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미래 세대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는 요구와 한계의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전 세계 빈곤층의 요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기술 상태와 사회조직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적 능력에 한계를 야기하므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sup>2)</sup>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WCED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장 친화적 국가와 중앙 계획적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경제와 사회발전의 목표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

2) WCED(1987).

하였다. 또한 개발은 경제 및 사회 체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수반하는데, 개발정책이 자원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 비용과 편익 분배에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정은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WCED는 과거 로마클럽의 주장과 달리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즉,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환경과 경제성장 간의 시너지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추상적인 비전 수준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키기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추진되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실행 형태는 경제·사회·환경의 세 가지 축(pillar)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축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사회 축은 빈곤해소, 소득분배 개선, 사회통합,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둔다. 환경 축은 부존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별 요소의 발전만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을 구성하는 세 축이 선순환적 구조 내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는 상태로 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3)</sup>

---

3) 강성진(2010a), p. 165.

## 2) EU의 지속가능발전 개념

유럽연합(EU) 조약(Treaty)은 WCED의 지속가능발전 정의에 의거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및 장기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EU 조약의 목표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 경쟁력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환경의 질 개선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글상자 2-1). 여기서 다른 두 요소보다도 사회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제 및 차별 금지, 사회적 정의 및 보호, 남녀평등, 세대 간의 연대 및 아동권리 보호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인 제21조 2(d)항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발전의 주된 목적을 빈곤퇴치에 두고 있고, 2(f)항에서는 글로벌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수단의 개발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h)항에서는 다자협력 및 국제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국제 시스템을 촉진하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EU 조약의 특징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조한 것인데, 이는 환경 문제가 다른 국가나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Rio+20 회의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UN환경프로그램(UNEP: UN Environment Programme)과 같은 다자기구의 위상 제고와 국제협력에 관한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4)</sup>

---

4) 강성진(2012c).

제3조

[유럽연합의 목표 관련 조항]

3. 유럽연합은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을 형성할 것이다. 이 시장은 균형된 경제성장, 가격 안정성, 완전고용과 사회적 진전을 목표로 한 경쟁력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환경의 질 개선에 기초하여 유럽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능할 것이다. 이 시장은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진작시킬 것이다.

이 시장은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을 근절하고, 사회적 정의 및 보호, 남녀평등, 세대 간의 연대, 아동 권리 보호를 촉진할 것이다. 경제, 사회, 지역적 화합을 도모하고, 회원국 간의 연대를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럽 문화유산의 보전과 강화를 보장할 것이다.

제21조

[유럽연합의 국제협력 관련 조항]

2. 유럽연합은 공동의 정책 및 행동을 정의하고 추구할 것이며, 국제관계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음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 (d) 빈곤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적 발전
- (f)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의 질을 보전하고 개선하며 글로벌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수단 개발을 지원
- (h) 강화된 다자협력과 건전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초한 국제시스템의 촉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EU의 대표적인 전략은 'EU 지속가능발전전략(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과 '유럽 2020(Europe 2020)'이다. EU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환경보호, 사회통합 및 빈곤퇴치를 위한 유럽의 장기 전략을 담고 있으며, 유럽 2020은 전략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유럽 2020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식과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스마트한 성장, 효율적인 자원 사용과 녹색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사회·지역적 통합을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핵심

이다. 기존 전략과 구별되는 것은 사회 및 지역의 통합, 역량강화, 고용창출 등 보다 많은 구성원에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 수준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5)</sup>

### 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개념

우리나라는 기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개정한 ‘지속가능발전법’을 2010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의 제2조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개념 또한 WCED와 EU의 지속가능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4)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의 지속가능발전 개념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은 Rio+20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녹색경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Further Step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Green Economy)’라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sup>6)</sup> 이

---

5) 보다 자세한 논의는 강성진(2012c) 참고.

6) 국제노사정기구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and Similar Institutions: AICESIS)은 1999년에 설립된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과 관련 기구의 모임으로서 세계 경제·사회 파트너간의 사회적 대화 촉진 및 노사정 협의기구 확대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09~11 및 2011~13년도 이사회에 진출하였다. Rio+20 회의 기간 중 개최된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노사정기구

보고서에서는 녹색경제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보아야 하며, 녹색경제나 녹색성장이 강조하는 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 녹색 거버넌스, 정치적 약속 등이 수반되어야 지속가능발전 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동안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의 선순환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2007년 중국 총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세계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 체계의 마련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 형평과 환경의무(equit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를 주제로 개최된 헝가리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2011년 이탈리아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축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UN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s: ECOSOC)의 역할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시민사회도 책임감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EU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국제노사정기구연합도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국가 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보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발전이라는 세 개의 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주체의 공동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거버넌

---

연합을 대표하여 ‘녹색경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나. 녹색경제

녹색경제란 경제성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서로 분리시키기 위하여 나타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89년 출판된 ‘녹색경제를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 Green Economy)’이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환경의 가치와 나아가 환경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경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로부터 2년 후 1991년에는 이 보고서의 2판인 ‘세계경제를 녹색화하기 위한 청사진 2(Blueprint 2: Greening the World Economy)’가 출판되었다. 앞서 발간된 1판에서 다루었던 것보다 광범위하게 전 세계의 환경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며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온난화, 제3세계의 환경파괴 문제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녹색경제를 위한 새 청사진(A New Blueprint for a Green Economy)’이 출판될 예정이다. 이 책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시에 완전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sup>7)</sup>

최근 녹색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는 UN 환경프로그램(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이 주도하고 있다. UNEP은 2011년에 발간한 ‘녹색경제를 향하여(Towards a Green Economy)’라는 보고서에서 녹색경제를 “인간의 행복(well-being)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환경적 위험과

---

7)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http://www.routledge.com/books/details/9781849713535/>

생태학적 결핍을 상당히 줄여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UNEP, 2011). 다시 말하면 녹색경제는 저탄소, 자원 효율적, 사회적으로 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GDP 중에서 약 2%(약 1.3조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와 이 자금을 10대 주요 녹색부문인 농업, 건설, 에너지, 수산업, 임업, 제조업, 관광산업, 운송업, 물, 폐기물 관리 부문으로의 투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의 경제성장, 고용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시경제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up>8)</sup> 분석결과를 보면 비록 단기적으로는 녹색부문에 대한 투자전환이 음의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전환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녹색경제로의 이전은 탄소 배출과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생태계 서비스 및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고, 동시에 민간투자를 통해 소득과 고용의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환경훼손 방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빈곤감소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sup>9)</sup>

---

8) 어떤 부문 혹은 산업이 녹색산업이나 라는 문제는 녹색과 비녹색에 대한 투자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리방법은 없지만 전체산업을 보고 녹색과 비녹색을 기술특허의 용도와 77대 녹색기술의 연계과정을 거쳐 분류한 것이 Kang(2011)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사업체들의 생산과정과 생산물에 대한 검토와 서베이를 통하여 녹색산업을 분류하고 있다(www.bls.gov).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녹색과 비녹색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 의하여 녹색부문에 대한 투자를 하지는 정책방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존 비녹색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투자도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9) UNEP(2011)에 의하면 거시경제 모델인 T21(Threshold 21)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글로벌 GDP의 2%를 투자하는 경우를 BAU(Business As Usual)로 가정하는 경우 글로벌 GDP 2%를 녹색부문에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비 1인당 GDP의 경우 BAU대비로 볼 때 2020년경까지는 오히려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증가하여 2030년과 2050년에 각각 2.4%와 13.9%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고용을 보면 2020년과 2030년에는 BAU대비 감소하고 2050년에는 0.6%가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에서도 녹색경제를 논의하였는데, 이는 ‘Rio+20: 녹색경제 그리고 더 나은 거버넌스를 향하여(Rio+20: Towards the Green Economy and Better Governance)’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녹색경제의 개념이 명확히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녹색화는 “지속가능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그동안 고려해왔던 방식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녹색경제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제의 녹색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 다. 녹색성장

### 1) 녹색성장 개념의 등장

녹색성장 정책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심화의 심각한 영향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과거의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인류는 과거 경제발전을 통하여 소득이 증대하고 삶은 보다 편리해졌으나 동시에 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가 함께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제발전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원과 환경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녹색성장인 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Ekins(2000)가 저술한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에서 “The Prospects for Green Growth”라는 부제를 사용되면서 학계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저서는 녹색성장의

정의나 명시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환경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과 경제성장 그리고 인간의 후생(human welfare)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기술변화와 적절한 정부 정책이 수립될 때 이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녹색성장을 이 저서의 부제로 삼았으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녹색성장의 개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이 바로 녹색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공식석상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5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or Asia and the Pacific)’이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주제 하에 환경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는 녹색성장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회의의 주요 결과물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가 제안되고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 의하면 아·태지역에서 경제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총 24개 정책분야를 지속적인 검토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sup>10)</sup> 이는 전통적인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여 왔던 환경부문과 빈곤, 즉 사회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각국이 녹색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 회의에서도 경제발전

---

1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상인 외(2006) 참고.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거의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제안이나 실천방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하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 혹은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한 것은 2008년 한국정부가 천명한 녹색성장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한국에서의 녹색성장 개념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 경제 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책적 및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저술한 『녹색성장의 길』(2009)에서는 녹색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 ‘녹색’과 ‘성장’을 서로 모순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며, ‘녹색’과 ‘성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경제성장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바로 녹색성장 개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기획위원회는 녹색성장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자원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 기술 등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산업 구조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sup>11)</sup>

대통령이 천명한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2009년 2월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질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총 망라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녹색성장의 선도국가가 되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라는 3대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10대 정책방향, 50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었다([표 2-1] 참고). 3대 전략을 자세히 보면 한국의 녹색성장은 첫 번째 전략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더 나아가 녹색성장 전략은 제 2 및 3 전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처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경제, 환경, 사회 그리고 생활에서의 발전까지 모두 고려하는 동화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11) 2011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녹색성장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2-1.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비전, 전략, 정책방향

비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2009).

정부는 녹색성장의 추진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기본적인 법적 장치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전략은 단순히 환경과 경제성장간의 선순환적 관계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환경과 경제성장에서 더 나아가 사회발전까지 고려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내고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이다(강성진, 2010a; 2010b).<sup>12)</sup>

### 3) 기타 녹색성장 개념

앞에서 제시된 녹색성장 이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다소 차이점은 있으나 환경과 경제성장간의 상호 시너지적 관계를 가져간다는 기본 인식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OECD(2011)는 녹색성장을 “자연자산(natural assets)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자원과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유엔아태지역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녹색성장을 “저탄소 및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의 진보를 강조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심의 정책”으로 정의한다.<sup>13)</sup> 또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t al.(2012)는 녹색성장을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원 및 그들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발전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정의한다. [표 2-2]는 지금까지 논의된 녹색성장 용어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sup>14)</sup>

---

12) 물론 뒤에 설명되겠지만 경제성장 및 환경에 비해 사회발전이라는 측면은 다른 두 측면보다는 덜 고려되어진 것은 사실이다.

13) UNESCAP의 정의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greengrowth.org>

14) 국가에 따라 유사한 정책방향이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2008년 발표한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저탄소사회(low carbon society)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스의 경우 녹색발전(Green Development)을 사용하고 있다.

표 2-2. 녹색성장의 정의 비교

기관·기구	녹색성장의 정의
제5차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2005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2008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미래기획위원회(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자원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 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산업 구조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 발전 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UNESCAP	저탄소 및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의 진보를 강조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심의 정책
OECD(2011년)	자연자산(natural assets)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자원과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
MLTM et. al (2012년)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원 및 그들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발전을 강화하는 전략

자료: 강성진(2012a).

#### 4) 녹색성장과 녹색경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통적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많은 국가에서 녹색경제 혹은 녹색성장 정책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녹색경제나 녹색성장 정책은 기존의 기후변화 대책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기후변화 대책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보다는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후변화 대책은 정책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수반하는 정책이 온실가스를 줄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녹색경제과 녹색성장 정책이다. 즉,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에 의한 생산 활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세계적 움직임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품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도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따른다면 선진국의 지원을 증대시킬 수 있고 동시에 국제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책에서 더 나아간 녹색경제나 녹색성장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추상적인 정의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된 UNEP(2011) 보고서와 [표 2-1]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비교하면 명확해 질 것이다. UNEP 보고서는 10개의 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저탄소, 자원 효율적 경제로 즉,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동시에 빈곤완화,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이보다 좀 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NEP 전략과 같이 친환경적 발전전략을 통하여 고용증대 및 경제성장이 달성 가능하다는 범위를 넘어서 기후변화 대책과 녹색사회 및 국제적 녹색전략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까지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정책차원에서는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이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으나 친환경적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고용증대,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를 추가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두 용어의 차이를 구분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용어는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 2.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녹색경제,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경제성장과 환경발전이 양립가능하다는 개념이 반영된 서로 유사한 용어이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이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5) 강상인 외(2012)는 좀 더 세밀한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녹색경제는 정태적이고 미시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녹색성장은 상대적으로 동태적이고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이라고 개념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면 녹색경제는 시장, 가격, 경제의 질 및 단기적 목표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인류의 환경 및 자원의 위기는 지구가 제공하는 생태용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생산과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다한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환경세 및 부담금 등과 같은 형태로 재화시장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와 생태 친화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하여 신성장동력과 녹색일자리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녹색경제나 녹색성장이 환경과 경제성장의 시너지적 관계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이라는 측면에는 동의하지만 세밀한 정책적 수단이나 방향을 보면 녹색경제에 비해 녹색성장은 경제성장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 경제발전 전략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이 훼손되었으나, 녹색성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성장을 통해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발전하게 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새로운 동력이 되어 경제발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발전→환경개선→경제발전→…’과 같은 선순환을 달성하자는 목적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친환경적 경제성장 전략이 가진 의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혹은 절대적) 빈곤의 감소, 계층 간 소득불평등의 해소, 사회적 통합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였다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발전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없다.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의 악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내기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녹색성장과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녹색성장과 녹색경제는 시장기능의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환경발전의 선순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발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국제회의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의 리우 지구정상회의, 2002년의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거쳐 지난 6월에 개최된 Rio+20 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발전의 한 축인 사회발전이 충분히 고려된 녹색경제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은행과 OECD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Rio+20,

세계은행 그리고 OECD에서의 논의의 동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가. Rio+20의 녹색경제

지난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Rio+20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1)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 (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식 의제로 하여 각 국의 정상들이 모여 개최한 UN지속가능발전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이다. 동 회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결과 문서를 통해 과거에 개최되었던 회의의 정치적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측면에서의 녹색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행동 계획 및 후속조치 그리고 이행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결과 문서중 제3장은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의 측면에서의 녹색경제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으며 이는 각 국이 녹색경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주요 수단임을 인식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와의 관계에 관한 3장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녹색경제는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이며, 지구 생태계의 건강한 기능 유지,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적 통합의 향상, 인류 복지 증진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리오 원칙’, ‘어젠다 21’, ‘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 ‘새천년개발목표’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이미

표 2-3. Rio+20에서 제시한 녹색경제 정책의 내용

1. 국제법과 일치해야 한다.
2. 지속가능발전의 세 측면과 관련하여 국가 상황, 목적, 책임, 우선순위를 고려한 자연 자원에 대한 각 국가의 국권을 존중해야 한다.
3. 시민 사회를 포함한 관련 이해 당사자의 참여 및 정부의 주역과 함께 모든 레벨에서의 환경 조성 및 제 기능을 하는 기관에 의해 지지 받아야 한다.
4. 지속가능하며 포용적 경제성장 촉진, 혁신 조성, 모든 인간에게 기회·혜택·권한 제공해야 한다.
5. 개발도상국의 필요성(needs)을 고려해야 한다.
6.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 역량구축(capacity-building), 재원 조성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7. 공적개발원조(ODA) 및 재원에 관한 부적절한 조건의 제한을 방지해야 한다.
8. 국제 무역에 대한 임의의 또는 정당성 없는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으며, 수입국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환경적 변화와 관련된 일반적 행동의 방지, 그리고 국제적 합의에 기반을 둔 초국경적(transboundary) 또는 전지구적 환경 문제를 강조한 환경 측정을 보장해야 한다.
9.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기술 차이를 좁히는데 기여하며, 모든 적절한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10. 원주민과 커뮤니티, 지역 및 전통 커뮤니티 그리고 소수민족의 정체성·문화·관심사를 고려한 복지 증진과 빈곤 근절에 기여할 수 있는 비시장적 접근의 존중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유산 및 관습, 전통 지식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11. 여성, 어린이, 청년, 장애인, 농부, 어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및 취약집단의 생계 및 권한을 향상해야 한다.
12.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잠재된 가능성을 동원하고 동등한 기여를 보장해야 한다.
13.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생산적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14. 불평등에 관한 우려 및 사회보호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s)을 포함한 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15.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촉진해야 한다.
16. 빈곤 및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포용적이며 공정한 발전 접근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설정된 각 계획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녹색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국제기구 및 각 국가들이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녹색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장에서는 환경과 경제발전 측면 뿐 아니라 사회발전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여성, 청년,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녹색경제 정책,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본 회의에서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위한 재정, 기술, 능력 배양 및 국가적 필요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기부자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한 UN의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 위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개발도상국의 비판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특히 녹색경제 정책을 이행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 과학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녹색경제 정책이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 paragraph 58인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3]이다.

## 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녹색성장

2012년 ‘녹색성장 정상회의(Global Green Growth Summit)’를 통해 발표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포용적 녹색성장(inclusive green growth)』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녹색성장/녹색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20년간 경제·사회 목표는 양립할 수 있고 상호 보완적이었던 반면에 경제·환경의 관계는 경제성장의 대가로 환경 훼손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녹색성장으로 포용적 녹색성장의 개념 등장하게 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녹색성장은 필수적(necessary), 효율적(efficient),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affordable)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필수적인 관점에서의 녹색성장이 의미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은 포용적 녹색성장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턴은 환경을 훼손해왔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에게 정당하면서도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포용적 녹색성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어린이와 여성의 보호·영양·교육·고용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 사회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효율적 관점에서의 녹색성장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의 성장 패턴은 지속 불가능하며, 낭비적이기 때문에, 효율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불필요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현재의 성장, 소비 패턴은 세계 인구 증가가 계속될 경우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 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은 시장 및 정부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환경정책은 환경오염과 다른 환경 유해 요소를 줄이면서 사회 복지 및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녹색 정책은 1) 이용할 수 있는 자연, 물질, 인적 자원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2) 환경세 및 불필요한 보조금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3) 혁신(innovation)을 자극하며, 4)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퇴치 등을 통하여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말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성장의 녹색화는 지속불가능한 길을 피하고, 즉각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녹색성장이 일회적인 정책

의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통해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다. OECD의 녹색성장 정책

2009년 OECD 장관회의에서 34개국<sup>16)</sup> 장관들은 저탄소 사회의 구축을 위한 ‘녹색성장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 세계가 기록적인 실직률, 재정 적자 가중, 저성장의 3대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혁신과 녹색성장을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OECD에 녹색성장전략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OECD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 및 제언을 담은 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Implementing our Commitment for a Sustainable Future’를 2010년 5월 장관회의에 제출하였다.

2010년 보고서는 녹색성장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정책입안자들이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녹색성장은 환경 및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불가능한 자연자원의 사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의된다. 녹색성장의 고려 대상은 녹색 산업·일자리·기술 개발, 전통적인 분야의 녹색화 과정, 이행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고용 등의 분배 효과 관리를 포함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은 경제 전반과 분야별 수준에서

---

16) OECD 30개 회원국 및 중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를 포함한다.

수요와 공급의 양면을 고려하고, 경제 및 환경 목표가 효과적으로 혼합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유지 및 시너지 발생이 가능한 정책이 조합되어야 한다. 녹색성장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 보고서는 녹색성장의 도전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포함되어 있는 녹색 요소를 파악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유해보조금을 녹색성장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그러한 보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격책정, 시장기반 정책수단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의 주요 수단인 기술혁신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 및 추세를 점검하였다.

OECD가 2011년에 발표한 'Towards Green Growth' 보고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 정책수단은 크게 탄소세와 거래제로 대표되는 탄소가격제도와 비가격수단으로 구분된다.<sup>17)</sup> 비가격수단은 성과 또는 기술에 대한 기준,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한다. 정책수단을 적용하는 경우 고려사항은 첫째, 비용 효과적인가, 둘째, 적용 및 이행의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 셋째,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와 투자자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시그널 제공 여부이다. 또한 녹색기술의 혁신 및 전파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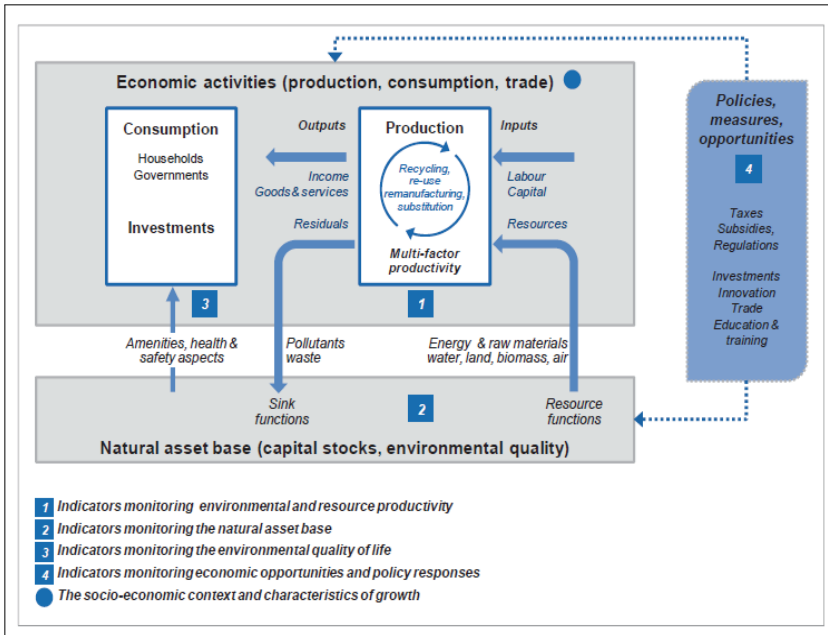
2011년 보고서는 녹색성장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지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분야이

---

17) 자세한 내용은 OECD(2011b) 참고.

다. 첫째, 환경 및 자원의 생산성, 둘째, 경제 및 사회적 자산, 셋째, 환경적 측면의 삶의 질, 넷째, 경제적 기회와 정책 대응이다. 녹색성장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의 도입은 GDP가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는 반영하지만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외부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이 보고서가 제안한 20여개의 지표는 [표 2-1]와 같다.

그림 2-1. 녹색성장지표의 체계



자료: OECD(2011a), p. 17.

표 2-3. 녹색성장 측정 지표(안)

그 룹	가능한 지표
환경 및 자원의 생산성 -탄소 및 에너지 생산성 -자원의 생산성 -다양한 요소 생산성	1. 이산화탄소 생산성 2. 에너지 생산성 3. 비에너지 자원의 생산성 4. 수자원 생산성 5. (환경서비스의 생산성)
자연자산기반 - 재생가능자원 -재생불가능자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6. 담수자원 7. 산림자원 8. 수산자원 9. 광물자원 10. 토지 11. 토양 12. 야생동식물
환경적 삶의 질 - 환경 관련 보건 및 위험 -환경서비스 및 편의시설	13. 환경관련 보건 문제 및 관련 비용 14. 자연 및 산업 위험에 대한 노출과 비용 15. 하수처리시설 및 식수
경제적 기회 및 정책 대응 - 기술 및 혁신 -환경 상품 및 서비스 -국제적 자금 흐름 -가격 및 이전 -훈련 및 기술개발 -규제 및 관리적 접근	16. R&D 17. 특허 18. 환경관련 혁신 19.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생산 20.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적 자금 흐름 21. 환경관련 세금부과 22. 에너지 가격부과 23. 수자원 가격 및 비용 회수 (지표 개발 필요) (지표 개발 필요)

자료: OECD(2011a), p. 32.

##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성장, 사회발전 그리고 친환경적 활동을 동시에 촉진하는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각각

의 요소들이 상호 대립적이지 않으며,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녹색경제와 녹색성장 정책차원에서 경제성장과 친환경적 활동의 축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사회발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발전은 절대빈곤 차원을 넘어 상대적 빈곤이나 소득분배의 불균등과 같은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역량강화나 사회통합 혹은 사회갈등 해소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개발도상국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또는 녹색성장과 같은 녹색경제는 서로 다른 정도로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녹색경제 정책과 더불어 사회발전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UNEP(2011)이나 OECD(2011a) 등과 같은 많은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녹색경제나 녹색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친환경적 경제성장으로 정책전환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공헌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의 사회발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빈곤의 감소는 사회발전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들 다른 요소들은 단순히 절대소득이 증가하는 경제성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절대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여러 문제의 가능성 예를 들면 상대빈곤 증가, 소득악화, 사회갈등, 남녀평등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득증대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해지게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요할 수 있는 만큼의 정부지출 여력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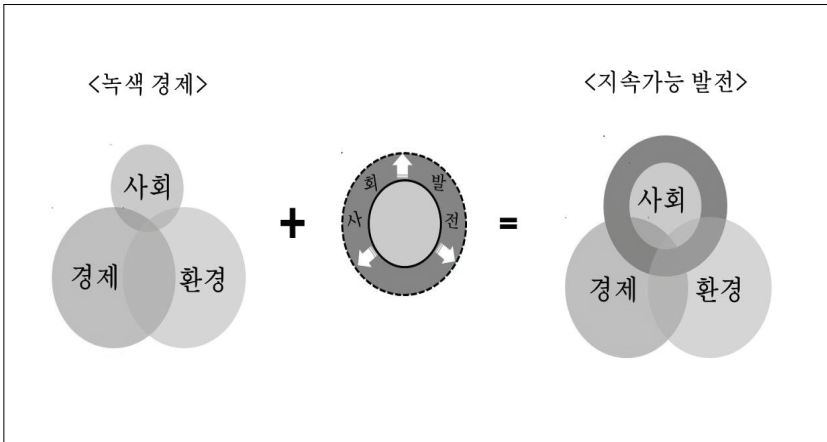
다양한 사회발전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녹색 경제 및 녹색성장 정책이 실시되면서 동시에 사회발전 정책도 실시되어야만 지속가능발전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정부의 이러한 사회발전 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없이 절대소득이 증가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사회발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따라서 녹색경제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녹색경제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나, 그 자체만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기존의 녹색 경제 정책을 통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용이 창출되어 간접적으로 절대빈곤의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발전의 한 측면일 뿐이다. 녹색경제 정책의 추진이 자동적으로 사회발전이나 사회의 포용력을 향상시켜주지는 않는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 이 세 가지 부문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도달 가능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녹색경제 정책이 사회발전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 2-2]에서 보여 주듯이 현재의 녹색경제 혹은 녹색성장 정책에 사회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경제성장과 환경정책과 균형 있게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만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적 전략이 될 수 있다.

2012년 Rio+20에서 발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의 보고서에서도 지속 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의 필요성은 UN 사회보호 최저선 이니셔티브(Social Protection Floor Initiative)나 유럽 경제사회위원회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시한 방안 등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부는 국제적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사회적 발전을 향상시키는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림 2-2.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제3장  
녹색경제 · 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의 역할



## 1. 녹색경제 · 녹색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책, 그리고 더 나아가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동참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경제발전에 큰 위협요소가 되며 녹색경제 또는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인류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환경문제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대에 정책 우선순위가 있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현재의 전 지구적 위기의 원인을 선진국들의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 돌리고 있어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선진국들은 산업화를 통해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자연을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고, 생산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 문제가 지니는 외부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동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주력 산업은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이 필연적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되어 온 산업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생산구조는 자국에서 생산하여 자국에서 소

비하는 구조이기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을 하고 다시 이를 수출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은 개발도상국의 소비 충족 욕구보다는 선진국의 소비 욕구에 따른 것이므로, 최종 소비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선진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라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기술력으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전면적인 도입은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의 생산수준을 낮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은 매우 취약하고, 선진국에 비해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기술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개발도상국은 녹색 기술과 산업 격차가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OECD(2012b)는 개발도상국들이 Rio+20 회의 준비 과정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18)</sup> 가장 큰 우려는 녹색 보호주의의 확산이다. 선진국이 무역규정에 녹색 요건을 추가하여 특정 상품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역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환경을 고려한 조달규정이나 글로벌 인증제도, 친환경마크(eco-labelling)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빈국들은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을 제한적인 역량, 재정지원의 부족, FDI 부재 등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한 국가의

---

18) 제안서 원문은 UNCSd 홈페이지(<http://www.uncsd2012.org/compdocument.html>)를 참고.

녹색성장 정책 이행 여부가 ODA 수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자발적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처방적 성격의 정책수립에 대해 반대한다. 외부에 의해 개발된 정책은 보통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텐데 이에 신속하게 반응하기에 수원국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Rio+20 결과문서는 녹색경제 정책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 수단으로 사용하되 개발도상국별 특수한 상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2. 국제협력의 필요성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렇다고 녹색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거부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은 낮은 기술력과 투자여력으로 인해 녹색경제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현재의 지구온난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들이 녹색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기술공유와 재정지원 그리고 역량강화가 포함된다.

반면에 선진국은 그동안 기술력을 충분히 축적해 왔으며, 현재도 기술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향후 선진국의 녹색기술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상호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선진국의 생태 효율적(eco-efficient)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녹색기술이나

생산과정이 개발도상국으로 성공적으로 전수될 수 있다면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녹색경제 상태로 전환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좁힐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Munasinghe(2008)는 기존의 환경 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을 수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상호 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개발도상국들은 기존의 선진국들이 따라왔던 경제발전 패턴보다 훨씬 친환경적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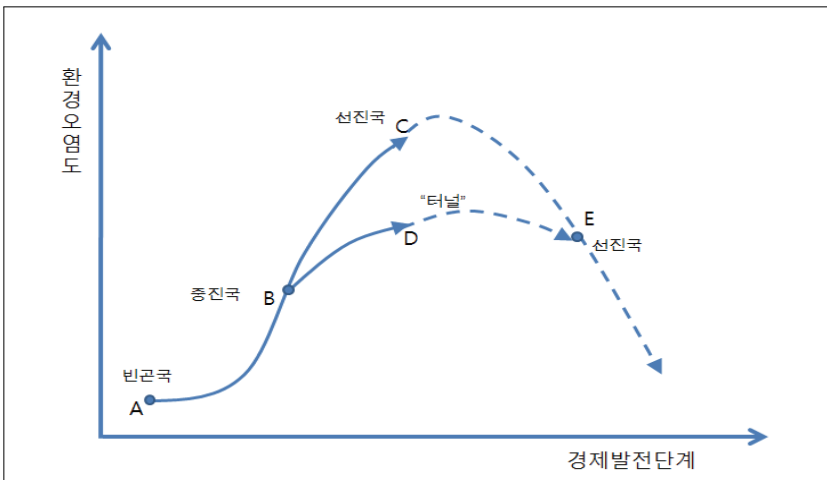
[그림 3-1]은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 준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경제발전단계를 보여주고 세로축은 환경오염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A단계의 국가를 보면 매우 소득이 낮은 상태의 국가로서 환경오염도도 매우 낮아 환경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인 국가이다. 이는 과거 수백 년 전의 우리가 살던 사회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비록 소득은 매우 낮아 가난하게 살았지만 당시 살고 있던 세계의 환경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A단계의 국가는 B단계를 지나 C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비록 국민소득 수준이 A 혹은 B단계에 비하여 높아진 상태이지만 환경오염의 정도는 매우 악화되어진 상태이다.

많은 국가들이 C단계에 도달하면 국민들이 소득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국민소득의 증가에 의하여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이러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와 더불어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이 따라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투자

가 증가하면서 오염상태도 개선되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지속되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의 정도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다면 [그림 3-1]과 같은 형태의 역 U자형의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A단계에서 B단계 그리고 C단계에 이르는 동안 환경오염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생산양식이 자원 소모적이고 온실가스 과다 배출적인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충분한 소득 수준에 도달한 C단계, D단계에서부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함에 따라 환경오염도는 낮아지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른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해진다.

그림 3-1. 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



자료: 강성진(2010a).

Munasinghe가 환경 쿠즈네츠곡선의 수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적절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선진국들이 따라온

경로가 아니라 B단계의 국가가 C단계가 아닌 D단계를 거쳐서 E단계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환경 쿠즈네츠 곡선에 의한 설명은 이 곡선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여 A단계에서 출발하여 B단계와 C단계를 거쳐서 선진국형의 E단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개발도상국도 소득수준이 적절한 수준에 이르면 환경에 대한 투자여력이 생기고 이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E단계의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아감을 의미한다.

후발 국가인 빈곤국, 중진국들도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D단계에서 C단계까지 가지 않고 터널을 통과하여 E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면 선진국과의 격차를 비교적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Munasinghe는 ‘터널효과(tunnel effect)’라고 불렀다.

개발도상국이 기존의 경로가 아닌 바로 E단계에 도달하는 터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Munasinghe의 주장이다. 개발도상국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기존의 경로를 벗어나기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도 어렵다. 선진국의 발달된 녹색기술력이 이전되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노하우 전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 등의 국제협력이 이뤄질 때 개발도상국은 터널을 통하여 D단계에서 바로 E단계로 진입하는, 기존의 경로에서의 하강(jump down)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A단계→B단계→D단계→터널→E단계’는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의 경제발전 경로인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제1목표인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전 지구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환경적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이를 국제협력을 통하여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과 기후기술센터(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의 설립을 합의하였다. 그 후 2011년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7)에서는 녹색기후기금 설계 위원회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기후기금의 출범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이후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기후기금 출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약속하고 있다.<sup>19)</sup> 물론 아직은 기금의 출범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출원 액수 및 구체적인 출원 방식에 대한 합의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녹색경제·녹색성장이라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최근 OECD(2012b)는 'Green Growth and Developing Countries'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하면서도 공평한(equitable)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이고 자원 효율적 방식을

---

19) 자세한 논의는 강성진(2012b) 참고

통해 녹색성장은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의 세 개의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에 도달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표 3-1].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 녹색성장의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효과

부 문	긍정적 효과
경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통한 GDP 증가</li> <li>• 생태계 서비스에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수입 획득</li> <li>• 위험 관리 및 취약성 대비를 통한 경제구조의 다각화</li> <li>• 녹색기술의 혁신, 접근성 제고</li> </ul>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자원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li> <li>• 생태적 한계를 고려한 자연자본의 사용</li> <li>• 부정적 환경영향 감소 및 자연 위기 및 재해 관리 제고</li> </ul>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회의 증가</li> <li>• 빈곤층이 혜택을 받는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 및 지속</li> <li>• 사회적, 인적, 지식 자본의 강화</li> <li>• 불평등 감소</li> </ul>

자료: OECD(2012b), p. 11.

### 가. 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역량 및 기술개발 지원

개발도상국이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역량부족이다. 개인과 조직의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범위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나 무엇보다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성장과 개발을 위하여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량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 환경을 창출하고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의사결정 및

재정계획 수립시 전 분야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량이 요구된다.

현재 역량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OECD, UNEP, 세계은행과 GGGI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 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이 대표적이다.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문 기술 및 지식의 배양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요구되며, 공여주체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적절한 진출입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 나. 녹색성장의 ODA에 통합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이미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상당한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이 실제 개발도상국에서의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분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녹색성장이 특정 분야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축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한다면 전체 ODA 규모에서 녹색성장 관련 지원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다는 모든 개발협력에서 녹색성장을 고려하는 이른바 ‘녹색성장 주류화’가 필요하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climate-proof), 재난 또는 재해 시에도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빈곤감소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빈곤층

의 기후변화 대응력(climate resilience)을 고려한 생계수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공여국 민간부문의 개발도상국 녹색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보증 또는 정책보험 같은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다. 정책 일관성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지원에 있어서도 개발협력 및 개발과 관련된 정책간 일관성 제고가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기초교육의 제공, 식량안보 보장, 물 공급 및 위생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최근 기후변화 현상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은 기후변화 적응 활동과 통합되어야 하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작용하도록 국제적인 협력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OECD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주요 요소를 자연자원의 건전한 관리 및 거버넌스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climate-resilient) 성장 모형, 저탄소 성장 촉진, 개발 및 빈곤해소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요소별 지원 사업은 [표 3-2]와 같다.

그림 3-2.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요소



자료: OECD(2010)를 참고하여 필자작성.

표 3-2.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주요 지원 분야

주요 요소	지원 분야
자연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거버넌스	- 자연자원의 오남용 방지 - 자연자원 사용에 대한 의존도 감소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의 영향력 및 취약성 분석 - 대응방안 마련 및 적응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성장	-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 에너지효율 제고(재활용, 재생에너지 사용, 폐기물 감소 등) - 저탄소 녹색기술 및 혁신 지원
개발 및 빈곤감소전략 지원	- 기존 빈곤감소전략 및 개발전략과 기후변화 관련 전략의 조화 - Co-benefit 접근

자료: OECD(2010).

개발의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접근방식의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적용은 개발 측면이 관련 정책 결정의 모든 부분에 고려되는 것을 보장하며, 녹색성장에 대한 정치적 약속, 관련 이해당사자간 협력 메커니즘, 정책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의 다방면에 걸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빈곤완화, 고용확대 등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녹색보호주의는 개발도상국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녹색성장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확대는 농업 기반의 개발도상국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식량작물과의 토지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제4장

#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 현황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 또는 녹색성장을 자신들의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할 선진국의 다양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전략은 녹색기술의 공유, 자금을 통한 지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방안 강구가 있다.

본 장에서는 그 중에서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자금협력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논의를 중점으로 한다.

녹색성장이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관한 ODA는 녹색성장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DAC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환경을 주요한(principal) 목적 또는 중요한(significant) 목적으로 하는 원조 사업에 환경 마커 또는 리오 마커(Rio marker)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발표한다. 최근에는 환경 마커와 리오 마커로 분류된 원조사업을 모두 고려한 ‘환경 ODA(aid to environment)’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 ODA의 정의로는 환경 이외의 다양한 ODA의 성격과 분야에 대한 자세한 구분은 어렵다. 따라서 전 세계 ODA 흐름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출처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목적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CRS 분류를 보고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코드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통계 집계를 통해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DAC의 환경 ODA가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녹색성장 지원 활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하에서는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환경 ODA의 정의를 알아보고 최근 사용하고

있는 녹색 ODA 및 녹색성장 ODA의 개념과의 차이점 및 추이를 비교한다. 그리고 CRS 목적코드를 사용하여 국제사회의 환경 ODA, 녹색 ODA 및 녹색성장 ODA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환경 ODA

### 가. 정의

OECD DAC에서 발표하고 있는 환경 ODA는 DAC 각 회원국이 보고하는 대외원조 중 환경부문이라고 정의되는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정책 마커를 의미하는데 이는 회원국들의 환경에 대한 원조와 리오 마커로 분류한 사업들을 환경 ODA로 규정하고 회원국별 규모를 분석하였다.

먼저 환경에 대한 원조는 1) 수원국, 지역 혹은 목표 집단의 환경개선을 가져오는 활동과 2) 제도 구축 및 역량 개발을 통하여 환경적 고려를 개발목표에 통합시키는 구체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원조를 환경에 대한 원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OECD DAC에서는 1998년부터 1992년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3개 리우협약의 주요 성과인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 협약, 사막화방지 협약에 해당하는 원조를 리오 마커로 분류하고 있다.

표 4-1. OECD DAC의 환경 ODA 개념

구 분	개 념
환경에 대한 원조	1) 수원국, 지역 혹은 목표 집단의 물리적 혹은 생물학적 환경 개선을 가져오는 활동 2) 제도 구축 혹은 역량 개발을 통해, 환경적 고려를 개발 목표에 통합시키는 구체적인 활동
리오 마커	1) 생물 다양성 관련 원조: 생물 다양성협약의 아래 3개 목적 중 최소한 하나를 촉진하는 활동 ① 생물다양성 보존, ②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생태계, 種 자원 혹은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③ 유전자원 활용 혜택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분배 2) 기후변화 관련 원조(완화, 적응) ①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혹은 제한함으로써,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예방하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활동 ② 기후변화 적응: 적응·회복 능력을 유지 혹은 증대시킴으로써, 기후변화와 기후관련 위험의 영향에 대한 인간 또는 자연체계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활동 3) 사막화 관련 원조 토지 황폐화 예방/완화, 부분적으로 황폐화된 토지의 복구 혹은 사막화된 토지의 개간을 통해, 건조, 반건조 및 반건조 습윤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거나,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는 활동

## 나. 현황

OECD DAC는 위의 두 부분의 원조를 수록한 ‘환경원조(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보고서를 매해 발표하고 있는데 [표 4-2]는 각 국가별 2009-2010 기간 동안의 평균 환경 ODA 액수와 전체 ODA에 대한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DAC 회원국의 환경 ODA는 2009~10년 평균 약 27%에 달했다. 환경 ODA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무려 56.3%에 달했다. 그 뒤를 이은 스웨덴과 핀란드도 환경 ODA 비중이 각각 52.1%, 44.6%를 나타냈으며, 독일 역시 42.7%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 ODA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호주, 미국, 네덜란드, 그리스이다. 한국의 경우는 약 2억 1천만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ODA의 14.4%로 DAC 평균보다도 낮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2. DAC 회원국의 환경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환경부문 A	환경부문 B	환경부문 C	환경부문 소계 (A+B+C)(%)	섹터로 분류 가능한 양자 ODA
호주	36	20	178	234(7.5)	3,107
오스트리아	7	18	33	58(14.8)	391
벨기에	21	156	198	375(29.1)	1,289
캐나다	49	143	402	594(23.6)	2,512
덴마크	139	18	277	434(31.9)	1,361
EC	535	492	1,803	2,831(25.2)	11,222
핀란드	59	123	200	383(44.6)	858
프랑스	1,027	462	718	2,206(32.3)	6,830
독일	360	1,187	2,441	3,988(42.7)	9,340
그리스	5	3	2	10(5.4)	185
아일랜드	2	0	74	76(16.5)	462
이탈리아	18	16	187	222(32.5)	683
일본	595	2,954	3,553	7,102(56.3)	12,616
한국	12	54	145	211(14.4)	1,463
룩셈부르크	3	4	45	52(26.4)	197
네덜란드	81	87	118	286(6.3)	4,539
뉴질랜드	2	2	30	34(19.2)	177
노르웨이	275	155	462	891(33.6)	2,655
포르투갈	1	27	5	33(12.7)	260
스페인	255	77	985	1,317(38.7)	3,407
스웨덴	126	170	606	901(52.1)	1,731
스위스	61	0	97	157(17.9)	876
영국	805	21	541	1,367(22.8)	6,006
미국	586	4	1,012	1,602(7.1)	22,525
DAC 회원국	5,060	6,193	14,111	25,365(27.1)	94,693

주: 1) 2009년과 2010년의 평균, 2009년 달러기준.

2) 환경부문 A(Environment as a sector)는 원조부문이 환경인 경우를 의미한다. 환경부문 B(Other activities as "principal objective")는 환경부문 투자대상의 명확한 목적이고 계획(design)도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환경부문 C(Activities scored as "significant objective")는 환경부문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지만 2차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OECD (2012a).

## 2.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

### 가. 정의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녹색경제 혹은 녹색성장 정책은 환경,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 생물다양성 및 사막화 방지 대책과 같은 기후변화 대책 이상의 정책수단 및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을 넘어 경제성장도 동시에 추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까지 고려하는 친환경적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4-2]에서 정의한 환경 ODA는 이러한 녹색경제나 녹색성장 정책 목표를 포함하기에는 너무 좁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 ODA는 환경 부문에 대한 원조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거나 리오 마케처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및 사막화 방지와 같은 기후변화와 연관된 부문에 대한 원조만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 ODA 차원을 넘어서 각국이 지향하고 있는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ODA 개념이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녹색 ODA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는 OECD DAC에 보고되고 있는 전체 ODA중에서 CRS 목적코드에 의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후변화, 환경, 산림 등 전통적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환경과 연관되는 분야에 대한 원조를 포함 시켜서 녹색 ODA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 ODA도 기후변화,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 국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의 3대 추진전략인 1)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2) 신성장동력 창출,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보자. DAC의 환경 ODA와 녹색 ODA의 정의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첫 번째 전략인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자립 측면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이 첫 번째 전략에 비하여 덜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 정책에 포함되는 모든 정책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ODA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차원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의 경제성장 및 발전, 녹색사회 구현, 녹색교육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하게 정의된 녹색성장 ODA 개념을 소개하고 각 국가별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 나. 녹색 ODA 및 녹색성장 ODA 분류

일반적으로 녹색 ODA의 분류는 KOICA에서 정의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강연화, 2009). 2009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7년 11%이던 전체 ODA 중에서 녹색 ODA 비중을 2013년 및 2020년에 각각 20%와 30%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지표에 사용된 정의가 바로 KOICA의 녹색 ODA 정의를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녹색 ODA는 전체 CRS 목적코드 196개 중에 31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포함 부문을 보면 환경, 산림, 에너지, 농업, 물 부문은 물론 말라리아 관리 및 예방과 같은 보건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임업 및 환경정책 등이

있다([표 4-3]).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른 녹색 ODA 범주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연관된 부문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만 녹색성장 정책이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인 친환경적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 혹은 녹색사회 및 녹색교육과 같은 다른 부문에 대한 원조는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드러낸다.

기존의 녹색 ODA의 CRS 목적코드에 녹색성장 정책의 3대 전략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CRS 목적코드를 고려한 녹색성장 ODA를 정의한 것이 [표 4-3]이다. 이 정의는 기존의 녹색 ODA에 24개 CRS 목적코드를 추가하고 있다.

이를 기존의 녹색 ODA와 비교해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식수개발(14021, 14022), 기초식수공급(14031) 및 기초위생(14032), 주택정책(16030)이 추가되었다. 경제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문에 많은 추가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경제성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운송부문(21010, 21030, 21081), 에너지정책 및 관리(23010), 전력송전(23040), 가스공급(23050) 가스화력발전소(23062) 및 원자력 부문(23064)이 추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으로부터 농업정책과 관리(31110), 농업개발(31120), 농업관련 기자재(31150),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31310)가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공업정책(32110), 기술개발(32182) 및 광물정책(32210)이 생산부문에서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다부문에서는 도시개발(43030) 및 농촌개발(43040)이 추가로 포함되고 있는데 이처럼 농촌이나 농업기술에 관한 부문을 포함하다는 것은 농업의 현대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농촌개발을 전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관심분야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3. 녹색성장 ODA 분류

CRS 분야	녹색성장 ODA(55개)	
	녹색 ODA(31개)	추가된 ODA(24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보건, 식수개발 및 위생	12262(말라리아 관리 및 예방) 14010(수자원 정책 및 행정관리) 14015(수자원 보호) 14020(식수개발 및 위생처리시설) 14030(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14040(하천개발) 14050(폐기물관리 및 처리) 14081(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부문 교육)	14021(식수개발-대규모) 14022(위생처리-대규모) 14031(기초식수공급) 14032(기초위생) 16030(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경제간접자본 및 서비스: 에너지 생산 및 공급	23030(전력생산/재생가능 자원 사용) 23065(수력발전소) 23066(지열발전소) 23067(태양에너지) 23068(풍력발전) 23069(조력발전) 23070(생물자원 에너지)	21010(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21030(철도운송) 21081(운송 및 항공부문 교육) 23010(에너지정책 및 행정관리) 23040(전력송전/배전) 23050(가스공급) 23062(가스화력발전소) 23064(원자력발전소) 23081(에너지교육 및 훈련) 23082(에너지연구)
생산: 농업, 임업, 수산업	31130(농지개발) 31140(농업용수자원) 31200(임업) 31210(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31220(임업개발) 31281(임업교육/훈련) 31282(임업연구) 31291(임산물 유통지원)	31110(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31120(농업개발) 31150(농업관련 기자재) 31310(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32110(공업정책 및 행정관리) 32182(기술연구개발) 32210(광물/공업정책, 행정, 관리)
다부문/크로스 커팅	41000(환경보호) 41010(환경정책 및 행정관리) 41020(생물권역 보호) 41030(생물다양성) 41050(홍수방지/대책) 41081(환경교육/훈련) 41082(환경연구)	43030(도시개발 및 관리) 43040(농촌개발)
인도적 지원	74010(재난방지 및 준비)	

주: 녹색 ODA는 강연화(2009)를 참조한 것이고 녹색성장 ODA는 Kang(2010)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지금까지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의 정의를 하는데 사용된 CRS 목적코드에 따른 통계집계 방식은 단점도 있다. 이들 코드가 포함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수십만 개의 개별 프로젝트가 단지 196개의 코드에 의해 분류됨으로 인하여 같은 코드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상호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녹색성장 ODA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적 저탄소 녹색사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녹색성장 ODA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CRS 목적코드로 명확히 정의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들 사업의 개별 특성을 어떻게 녹색성장과 연관되게 파악될 수 있는가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료가 사업수준 원조(Project-level Aid: PLAID) 자료이다. 이 자료는 OECD DAC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조자료 뿐만 아니라 양자간 및 다자간 원조기구들의 연차보고서 및 발표 자료를 취합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취합한 것이다.<sup>20)</sup>

Hicks et al. (2008)은 PLAID자료를 이용하여 원조사업별 키워드를 이용하여 전체 자료를 환경적으로 강하게 정의된(Environmental Strictly Defined: ESD) 사업, 환경적으로 넓게 정의된(Environmental Broadly Defined: EBD) 사업, 비환경적으로 넓게 정의된(Dirty Broadly Defined: DBD) 사업 그리고 비환경적으로 강하게 정의된(Dirty Strictly Defined: DSD) 사업으로 분류하여 환경 원조(Environmental Aid)를 녹색(green)과 갈색(brown)으로 구분하고 이 자료의 추이를 비교하였다.<sup>21)</sup>

1980-1999년 기간 동안의 결과를 보면 1980년대에는 두 원조 형태 모두

---

20)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aiddata.org/>) 참고.

21) 녹색은 글로벌하거나 지역적인 환경문제를 다루고 동시에 수원국 이외의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갈색은 지역적이고 수원국 내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Hicks et al., 2008, p. 31).

가 일정한 액수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1990년대에 이르러 리오선언이 1992년에 이루어진 후 주로 물 사업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면서 갈색원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갈색원조의 비중은 리오선언 이후 전체원조의 5%에서 1990년대 중반에 9%로 증가하였다. 녹색원조는 1980년대에 전체원조의 1%에서 1990년대에는 3%로 증가하였다. 점차 녹색원조는 환경원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 전체 환경원조의 20% 수준에서 1990년대 말에는 거의 30% 이상에 이르렀다. 그리고 녹색 및 갈색 원조를 합한 환경원조의 추이를 보면 1993-1997년 기간에 전체 원조에서 약 12%였고,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서 보면 환경원조는 전체 원조의 10% 미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 주고 있다.

#### 다. 녹색 ODA 추이

앞의 [표 4-3]에서 정의된 녹색 ODA 분류에 따라, 녹색 ODA의 금액 그리고 양자 ODA 대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DAC 국가의 녹색 ODA 평균 액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나, 평균 비중은 2000년 15.9%에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10.6%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시점으로 가장 많은 녹색 ODA 금액과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서 약 29억 2천 6백만 달러(22.5%)에 달한다. 이는 2000년도의 녹색 ODA 비중인 22.5%와 유사한 수준이다. 2009년도 녹색 ODA의 비중에 따른 순위로는 스페인(20.9%)과 독일(16.3%)이 1위인 일본의 뒤를 잇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핀란드(12.1%), 덴마크(11.9%),

표 4-4. DAC 회원국의 녹색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0	2006	2007	2008	2009
호주	34	33	100	88	157
	(5.8)	(1.9)	(4.4)	(3.3)	(6.8)
오스트리아	4	20	29	33	28
	(2.1)	(1.8)	(2.1)	(2.5)	(5.4)
벨기에	15	60	72	85	82
	(3.0)	(4.2)	(5.4)	(5.7)	(4.9)
캐나다	59	104	78	99	189
	(11.7)	(5.3)	(3.4)	(3.0)	(5.9)
덴마크	45	218	198	205	198
	(19.3)	(20.6)	(13.7)	(13.9)	(11.9)
EC	36	621	694	976	1,083
	(3.8)	(6.1)	(6.1)	(6.6)	(8.2)
핀란드	40	39	63	74	95
	(14.5)	(8.1)	(10.7)	(10.6)	(12.1)
프랑스	158	415	364	624	850
	(8.4)	(4.7)	(4.8)	(7.9)	(8.8)
독일	365	766	989	1,256	1,364
	(31.2)	(8.9)	(10.6)	(11.4)	(16.3)
그리스	-	3	15	2	9
	-	(1.4)	(6.0)	(0.7)	(3.1)
아일랜드	-	22	32	51	33
	-	(3.6)	(3.9)	(5.5)	(4.8)
이탈리아	13	120	145	56	84
	(15.0)	(5.1)	(9.2)	(2.7)	(8.0)
일본	2,011	1,725	1,800	2,997	2,926
	(22.5)	(13.4)	(15.7)	(20.4)	(22.5)
한국	-	25	53	71	81
	-	(6.2)	(10.0)	(12.3)	(13.2)
룩셈부르크	-	14	19	26	31
	-	(7.2)	(7.5)	(9.3)	(11.9)
네덜란드	-	310	446	556	471
	-	(6.6)	(9.3)	(10.1)	(9.5)

표 4-4. 계속

국가	2000	2006	2007	2008	2009
뉴질랜드	-	7	7	10	6
	-	(3.4)	(2.8)	(59.1)	(2.9)
노르웨이	-	170	375	279	378
	-	(7.7)	(13.0)	(9.2)	(11.9)
포르투갈	0	3	4	3	2
	(0.6)	(1.4)	(1.3)	(0.8)	(0.8)
스페인	81	153	325	838	992
	(9.1)	(6.7)	(9.2)	(15.5)	(20.9)
스웨덴	24	167	183	223	256
	(3.5)	(5.9)	(6.3)	(7.1)	(8.5)
스위스	-	68	69	92	100
	-	(5.4)	(5.4)	(5.9)	(5.7)
영국	65	157	349	325	881
	(6.7)	(1.9)	(4.7)	(4.1)	(11.4)
미국	-	1,192	945	755	975
	-	(5.4)	(4.8)	(3.0)	(3.8)
DAC 회원국	2,981	8,238	9,318	12,349	14,430
	(15.9)	(5.5)	(8.2)	(9.5)	(10.6)

주: 괄호는 각국의 양자 ODA 중 녹색 ODA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OECD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룩셈부르크(11.9%), 노르웨이(11.9%) 등의 유럽국가들이 높은 ODA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같은 년도 비유럽 국가들 가령 호주(6.8%), 캐나다(5.9%), 미국(3.8%), 뉴질랜드(2.9%)의 경우 DAC 회원국 평균치인 10.6%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6년도를 시작으로 2천 5백만 달러(6.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5천 3백만 달러(10.0%), 2008년에는 7천 1백만 달러(12.3%)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는 8천 1백만 달러로서 13.2%의 높은 비중을 달성했으며, 이는 OECD DAC 국가 가운데, 일본, 스페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순위에 해당한다.

## 라. 녹색성장 ODA 추이

[표 4-5]는 DAC 회원국에 대하여 [표 4-3]에서 정의된 녹색성장 ODA의 액수와 전체 양자 ODA 중에서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DAC 평균 양자 ODA 중 녹색성장 ODA 비중은 2000년 31.6%에서 그 이후 오히려 감소하여 2006년 10.6%, 2008년 16.6% 그리고 2009년 18.0%에 이르렀다. 이는 여전히 2000년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중에서 녹색성장 ODA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000년 43.9%에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8년과 2009년 각각 34.6%와 38.0%를 보여 주고 있다. 비록 2000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비율 면에서 보면 OECD DAC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들은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스페인(31.1%), 독일(24.8%)과 덴마크(19.7%)이다. 그 외에 룩셈부르크(17.5%), 프랑스(14.8%), 네덜란드(12.6%), 스위스(10.9%)를 보여주어 유럽 국가들의 녹색성장 ODA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미국(10.6%), 캐나다(9.1%), 호주(11.1%), 뉴질랜드(6.5%)에서 알 수 있듯이 비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환경 ODA와 달리 CRS 목적코드로 분류한 녹색성장 ODA를 보면 한국은 2006년에는 22.6%, 2007년에는 23.8%, 2008년에는 19.6%, 2009년에는 22.5%로, 연도별로 다소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전체 DAC 회원국 중에서 녹색성장 ODA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DAC 회원국의 녹색성장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0	2006	2007	2008	2009
호주	52	80	168	168	256
	(8.9)	(4.6)	(7.4)	(6.3)	(11.1)
오스트리아	7	40	46	63	53
	(3.6)	(3.6)	(3.4)	(4.9)	(10.2)
벨기에	49	111	135	162	179
	(9.9)	(7.8)	(10.2)	(10.9)	(10.8)
캐나다	125	178	180	225	289
	(24.4)	(9.1)	(7.9)	(6.9)	(9.1)
덴마크	70	298	291	313	328
	(30.4)	(28.2)	(20.2)	(21.2)	(19.7)
EC	121	1,269	1,484	2,270	2,150
	(12.7)	(12.5)	(12.9)	(15.4)	(16.3)
핀란드	51	65	102	122	140
	(18.6)	(13.4)	(17.5)	(17.5)	(17.8)
프랑스	372	770	796	1,301	1,434
	(19.8)	(8.8)	(10.4)	(16.4)	(14.8)
독일	654	1,131	1,488	2,035	2,070
	(55.9)	(13.1)	(15.9)	(18.4)	(24.8)
그리스	-	4	16	4	12
	-	(2.0)	(6.6)	(12.7)	(4.1)
아일랜드	0	43	65	116	69
	(2.5)	(6.8)	(7.9)	(12.4)	(9.8)
이탈리아	20	167	208	110	156
	(22.8)	(7.1)	(13.2)	(5.3)	(14.8)
일본	3,925	2,986	3,027	5,081	4,933
	(43.9)	(23.2)	(26.4)	(34.6)	(38.0)
한국	-	91	125	113	139
	-	(22.6)	(23.8)	(19.6)	(22.5)
룩셈부르크	-	31	44	45	46
	-	(15.5)	(17.3)	(16.3)	(17.5)
네덜란드	-	411	617	822	626
	-	(8.7)	(12.8)	(15.0)	(12.6)

표 4-5. 계속

국가	2000	2006	2007	2008	2009
뉴질랜드	-	13	15	19	15
	-	(6.9)	(6.5)	(6.9)	(6.5)
노르웨이	-	291	500	452	554
	-	(13.2)	(17.4)	(14.9)	(17.5)
포르투갈	0	7	30	23	8
	(0.8)	(3.4)	(9.9)	(6.0)	(2.7)
스페인	155	413	633	1,221	1,474
	(17.5)	(18.0)	(17.9)	(22.6)	(31.1)
스웨덴	99	359	410	468	447
	(14.5)	(12.7)	(14.0)	(14.9)	(14.7)
스위스	0	153	157	195	192
	(0.0)	(12.1)	(12.3)	(12.5)	(10.9)
영국	181	484	637	617	1,271
	(18.6)	(5.9)	(8.7)	(7.8)	(16.5)
미국	0	3,166	2,298	2,638	2,760
	(0.0)	(14.3)	(11.6)	(10.6)	(10.6)
DAC 회원국	5,912	15,611	16,664	21,936	24,527
	(31.6)	(10.4)	(14.7)	(17.0)	(18.0)

주: 괄호는 각국의 양자 ODA 중 녹색성장 ODA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OECD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3.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 비교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의 규모와 비중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DAC의 환경 ODA 비중은 녹색성장 ODA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DAC의 환경 ODA 통계가 마커에 기반을 둔 것으로 환경 관련 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중요한(significant) 목적이<sup>22)</sup>

환경일 경우에는 환경 ODA로 계상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표 4-2]에서 DAC 회원국 전체 환경 ODA에서 환경이 주요한 목적인 ODA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마커의 기록이 개별 국가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sup>23)</sup>

DAC의 환경 ODA는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를 합산한 것인데 반해, 이 보고서의 녹색성장 ODA는 해당 CRS 목적코드로 분류된 프로젝트의 규모를 총합한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히 녹색성장을 도모하지 않은 경우에도 녹색성장 ODA로 분류될 수 있다. 녹색성장 ODA의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국별 비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의 녹색성장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매우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녹색성장 ODA와 DAC 환경 ODA와 비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각각에 대한 비중이다. 전자의 경우,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22.5%로 DAC 회원국 중 일본, 스페인 및 독일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으나, 환경 ODA 비중은 2009년과 2010년 평균으로 14.4%로 순위는 하위권이다. DAC의 환경 ODA 비중이 녹색성장 ODA 비중보다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미국, 네덜란드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그 차이가 미미하다. 이러한 점은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녹색성장 ODA의 범주를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22) 영문 그대로 중요한 목적(significant objective)이라고 직역하였으나, 실제 의미는 ‘부수적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23) DAC는 CRS 통계지침(statistical directive)에서 마커 유형을 설명하면서 마커가 표기될 수 있는 사업들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이 예는 포괄적일 수 없다. 따라서 DAC 회원국은 지침을 따르되, 예로 제시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통계기업자의 판단에 따라 마커 기록이 이루어진다.

# 제5장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녹색성장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는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의 중요한 3대 전략 중의 하나이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자 ODA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다자협력 역시 적극 수행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을 주도하여 2012년 Rio+20 회의 기간 중 여러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국제기구화에 성공하였다. 지난 10월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글로벌 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2009년 국가전략 수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녹색성장 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 공유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의하여 온 환경 ODA나 녹색 ODA 개념에서 더 나아가 새로이 정의된 녹색성장 ODA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권고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침해하는 것만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동시에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라는 당면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계적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동시에 자신들의 당면과제인 경제발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전체 ODA와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부문의 국제협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모범적인 녹색성장 선도국의 명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이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국의 모든 부문과 달성목표를 모두 포괄하는 추상적인 원조 목표를 세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정책을 실시하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ODA 규모에 부합하여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원조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원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원조와 목표가 모두 합해진다면 우리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의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에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은 개발경험분야(개발경험 정리, 정책 컨설팅), 사업기술분야(경쟁력 기술,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감성분야(감동사례 발굴·공유, 한국적 미와 정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목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sup>24)</sup> 예를 들어 녹색

---

24) 일본은 원조의 목적을 세계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따라서 일본의 안전에 번영에 도움이 되는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and development, and thereby help ensure Japan's security and prosperity”)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OECD, 2009).

성장 정책에서 제시하였듯이 우리나라의 ODA를 주로 녹색성장 부문에 집중하여 그 비중을 DAC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 ODA를 통한 지원이 국제사회가 원조를 통해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sup>25)</sup> 비록 녹색성장 ODA가 빈곤해소와 유아사망률 감소와 같은 MDGs의 8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 원조는 아닐 수 있지만 간접적인 효과를 통하여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대한 녹색성장 원조를 통한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은 이 지역의 친환경적 성장을 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빈곤 및 기아가 감소하는 등 그 지역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비록 녹색성장 ODA가 빈곤이나 기아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삼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지역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와 결국은 해당 지역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교육수준을 상승시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우리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거버넌스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던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개념을 공유하고 녹색성장이 개발도상국에서도

---

25) MDGs에는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유아 사망률 감소, 모성건강 증진,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글로벌 파트너십 등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Rio+20 총회에서는 2015년에 끝나는 새천년개발목표를 수정하여 그 이후에는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자 의결하였다.

실현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총 원조액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원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은 바로 비교우위라 할 수 있다.

넷째, 전체 ODA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녹색성장 ODA 부분의 분절화 및 중복성을 지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이 필요하다. 비록 2006년 설립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의 계획수립, 집행 및 평가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ODA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정부기관들이 서로 사업 확장을 통한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중복성 및 분절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분절화 문제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사 프로젝트당 매우 작은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효과도 미미하면서 수원국의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정부가 적극 추진한 녹색성장은 국내적으로보다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컸다고 본다. 대외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보다 추진력이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녹색성장 분야 국제협력 수행을 위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녹색성장 분야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민간부문의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수 컨설팅업체들이 녹색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이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전반적인 개발협

력 인력 부족은 분야별 경쟁을 심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분야별, 지역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동원하여 민간부문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라는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과 동시에 성장을 위한 수익모델이 기초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는 녹색성장을 성공을 가름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온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지원이 성장 측면에서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기후변화 대응의 실제적 효과는 크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의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성 평가를 심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 영세 컨설팅 기관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수준의 평가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지원성과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2008년 발표한 녹색성장 정책은 단순히 한국만의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만을 추구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외부성이라는 문제를 내재화(internalization)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상생적 협력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상인 외, 2006,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후속조치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강상인 외, 2012, Rio+20 녹색경제 의제에 관한 국가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강성진, 2010a, “녹색성장과 한국경제”,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pp.153-177.
- 강성진, 2010b,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정책 제언”, 『국제문제연구』, 제10권, 제1호, pp.1-39.
- 강성진, 2012a,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memeo.
- 강성진, 2012b, "거대한 기후변화의 시기-더 이상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 동아일보사, pp.280-329.
- 강성진, 2012c, “녹색경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국제노동정치기구연합 보고서.
- 강연화, 2009,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ODA", 『국제개발협력』, No.4, pp.117-132.n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방안』, 관계부처합동.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 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성장의 길』, 중앙북스.
- 이명박, 2008,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0599호), [시행 2012.4.15] [타법개정 2011.4.1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5호), [시행 2012.4.27] [타법개정

2012.4.27]

지속가능발전법(법률 제9331호), [시행 2010.4.14] [타법개정 2010.1.13]

[영문자료]

Kang, S.J., 2010, Green Growth ODA, in Green Growth: Global Cooperation, NRCS & Random House.

Kang, S.J., 2011, Economic Spillover Effects of Green Industry, in Green Growth: Green Industry and Green Job, NRCS & Daonad.

Ekins, P., 2000,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rospects for *Green Growth*.

European Economics and Social Committee, 2011, “Rio+20: Towards the Green Economy and Better Governance”.

Hicks, R.L., B.C. Parks, J.T. Roberts and M.J. Tierney, 2008, *Greening Aid?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Assistance*, Oxford University Press.

Meadows, D.H., J. Randers, D.L. Meadows and W.W. Behrens, 1972,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Munasinghe, M., 2008, *Address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Challenges Together: Applying the Sustainomics Framework*, Keynote Speech of Beijing Forum 2008.

OECD, 2010, *Interim Report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 Implementing our Commitment for a Sustainable Future*,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27-29 May 2010

OECD, 2011a, *Towards Green Growth*, OECD.

OECD, 2011b, *Tools for Delivering on Green Growth*, OECD.

OECD, 2012a,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OECD.

OECD, 2012b, *Green Growth and Developing Countries: Consultation Draft*, OECD.

- Pearce, D.W., A. Markandya and E.B. Barbier, 1989, *Blueprint for a Green Economy*, Earthscan Publication, London.
- Pearce, D.W., 1991, *Blueprint 2: Greening the World Economy*, Earthscan Publication, London.
-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the Korea Water Resources, and the World Water Council, 2012, *Water and Green Growth*.
-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 UN, 1987, *Th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The Future We Want”, United Nations.
- UNEP, 2011, *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UNEP.
- World Bank, 2012, *Inclusive Green Growth: The Path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웹사이트]

<http://www.aiddata.org/>

<http://www.greengrowth.org>

<http://www.routledge.com/books/details/9781849713535>

<http://www.uncsd2012.org/compdocument.html>

<http://www.unep.org/greeneconomy>

ODA 정책연구 12-07 / 연구자료 12-17

##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인쇄일 | 2012년 12월 26일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발행인 | **채 욱**

발행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3460-1142 FAX: 3460-1144

인쇄 | 오롬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등록 |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322-3 94320

978-89-322-2064-2(세트)

정가 5,000원



ODA 정책연구 **12-07**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 ODA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www.kiep.go.kr>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TEL. (02)3460-1289 FAX. (02)3460-1279



정가 5,000원